

스타트업·스마트공장 지원... 中企와 기술협업

단순 기부 넘어 상생... 사회문제 해결 대기업이 나선다

세계가 '상생'이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순 기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국내 경제 구조도 한층 단단해지는 모습이다.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대신 총수 경영권을 보장받는 유럽을 롤모델로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3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 기업 시민 성과발표회'에서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최 회장이 SK가 아닌 기업 행사에서 연단에 선 것은 처음이다. 대기업 총수가 다른 기업 행사에 참여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경영 철학을 강조하며 포스코와의 협력을 예고했다.

앞서 최 회장은 일찌감치 기업이 이윤 추구를 벗어나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올해에는 기업을 단순 실적이 아닌 사회에 끼친 영향으로 평가하는 측정 방법을 완성하고, 이를 SK그룹 전사적으로 적용하기도 했다.

최 회장이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대 변화 때문이다. 기업이 이익만을 추구하다보면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미래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며,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고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론을 펼쳐왔다.

이 같은 철학은 재계 전반으로도 전파되는 분위기다. 기업들이 기부금을 줄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지난 10월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회장(오른쪽 두번째)이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19 기업시민 포스코 성과공유의 장 행사장을 찾아 최정우 포스코 회장(오른쪽 첫번째)과 함께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협업체계 구축 등 '체감 상생' 초점
삼성전자, 제조업 지원·육성 활발
최태원 회장 '사회 가치' 지속 강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지난 10월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신, 협력사 지원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육성에도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삼성전자가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 올 초 '함께가요 미래로! 인에이블링 피플'이라는 새로운 사회공헌 비전을 발표하고 '드림클래스'와 '씨랩 아웃사이드' 등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 게 대표적이다. 청년 전문가를 육성해 취업난 등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활동으로 평가된다.

'반도체 비전 2030' 역시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대규모 상생안을 포함했다. 시스템 반도체 부

문 육성과 동시에 패키징과 패키징 등 관련 협력사들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상생 노력은 일본 수출 규제에서 본격적으로 빛을 발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진두지휘하면서 국내 산업계 약점으로 지적됐던 반도체 소재와 장비 업체들에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견고히 하는데에도 성공했다.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도 삼성전자의 핵심 상생 노력으로 꼽힌다. 삼성전자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기획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스마트 공장 구축을 조인하고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4차산업혁명에 대응해 중소제조업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노력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7번째 '자상한 기업'에도 선정됐다.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도 꾸준히 강화할 예정이다.

최태원 SK회장(오른쪽 두번째)이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19 기업시민 포스코 성과공유의 장 행사장을 찾아 최정우 포스코 회장(오른쪽 첫번째)과 함께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그룹도 협력사 지원은 물론, 데이터와 기술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공유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나섰다. 데이터 오픈 플랫폼 개발자 포털인 '현대 디벨로퍼스'를 통해서다. 그 밖에 대기업들도 실적 개선보다는 상생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은 선진국 대기업들을 롤모델로 삼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이 고용과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대신,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차등의결권 제도로 오히려 일가 소유권을 보장 받는 형태다. 장기 투자 등 안정적인 경영을 가능케해 기업과 국민이 '윈-윈'하는 구조로 평가받는다.

스웨덴 발렌베리그룹이 대표적이다.

일렉트로룩스와 에릭슨을 비롯해 금융과 중공업 등 여러 업체를 보유한 회사로, 현지 고용을 책임지는 등 존경받는 대기업 중 하나다. 발렌베리 가문이 5대째 회장을 맡고 있다. 발렌베리그룹 회장은 오는 18일 방한할 예정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등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국내에서는 경영권 보장 제도가 자리잡지 못하는 분위기다.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을 허용해주는 시도가 있었지만 지난 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현대차가 지배구조 개편에 난항을 겪는 등 국내 재계가 소규모 자본의 공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재용기자 juk@metroseoul.co.kr

푸드테크 기반 미래식품시장 17兆·7.5만개

(규모) (일자리)

정부 '식품산업 활력제고'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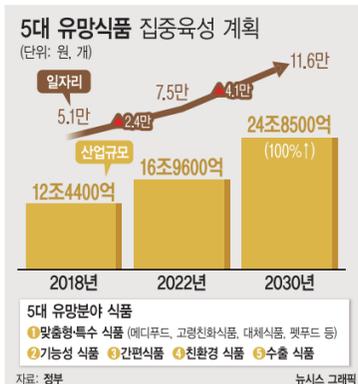
고령화식품 등 5대 유망식품 선정 제도 손질하고 연구개발 지원키로

정부가 식물성 대체육 등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특수 식품을 집중 육성한다. 미래 5대 유망식품을 선정해 오는 2022년 까지 이시장을 17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분야의 일자리도 7만5000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4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5대 유망식품 집중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식품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분야를 발굴·육성해 혁신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정부는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큰 5대 유망분야로 ▲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펫푸드 등 맞춤형·특수 식품 ▲기능성 식품 ▲간편식품 ▲친환경 식품 ▲수출 식품을 선정했다.

제도 정비와 규제개선,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5대 분야의 국내산업 규모를 2018년 12조4400억원에서 2022년



16조 9600억원, 2030년에는 24조85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18년 5만 1000개 수준의 일자리도 2022년에는 7만4700개, 2030년에는 11만5800개까지 늘려 갈 계획이다.

우선 메디푸드, 대체육과 같은 맞춤형·특수식품 시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초기 형성을 돕기로 했다.

식단관리용 제품과 같은 메디푸드는 제품에 질환명 표시가 가능하도록 '식사관리용 식단제품'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기준과 규격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물성 대체육과 같은 대체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체식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도록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하는 것도 검토한다. 또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 2022년까지 대체식품에 관한 표시·규격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절차 등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펫푸드는 국산 제품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양축용 사료에서 분리해 독자적 원료, 가공, 표시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칭)펫푸드 관리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능성 식품의 경우,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을 확장하는 한편 신사업 창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기능성이 증명됐다면 일반 식품이더라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맞춤형 제품이 가능하도록 건강기능식품의 혼합 및 소분 포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간편식품은 급속 냉·해동 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차세대 간편식으로 주목받는 말키트 제품의 식품 유형을 신설한다. 친환경식품은 '유기' 표시 기준을 기존의 유기 원료 함량 9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인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친환경 식품 생산 단지인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를 조성해 인프라도 확충한다.

/이세경 기자 seilee@

현대차 '실리'... 한국지엠 '강성' 국내車업계 새노조 집행부 매듭

지엠, 현안 산적... 난항 전망

현대자동차 노조는 '실리'를, 한국지엠 노조는 '강성'을 선택했다. 올해 노사 갈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한국지엠은 내년에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8대 임원 선거 결선 투표를 실시한 결과, 기호 3번 이상수 후보가 지부장으로 선출됐다 4일 밝혔다.

이상수 당선자는 실리·중도 노선의 현장조직인 '현장노동자' 의장으로, 2009년 이경훈 3대 집행부에서 수석부지부장으로 활동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에는 4년여 만에 실리 노선의 집행부가 들어서게 된다.

이 당선자는 4차 산업 고용 불안 해소, 조합원 고용 안정, 합리적 노동운동으로 조합원 실리 확보, 장기근속 및 특별채용 조합원 차별 철폐, 투명경영 견인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미래차시대를 맞아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노동자 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불안 해소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평가다.

이 당선자는 당선 직후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현대차가 향후 미래차 전략을 위해 인력재배치를 단행할 경우 새 노조 집행부와 빠르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반면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강성 성향의 김성갑 후보를 지도부로 선출했다. 김 지부장은 1986년 한국지엠의 전신인 대우자동차에 입사,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선 쟁의과정에서 2차례 부당해고를 당했고 이후 복직되는 등 강성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 지부장은 파업투쟁 전술강화, 현장 활동 강화 등을 통해 현장과 함께하는 강력한 노동조합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5대 지도부가 지난달 사측과 임금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강성 성향이 새 지도부를 이끌게 되면서

기분급 인상과 신차 생산량량 배정, 해고자 복직 등을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새 지도부가 최근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등의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지도 관심사다. 김성갑 신임 지부장은 "현장의 신뢰를 받고, 강력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 혁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